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 일지

- 4월 7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발생, 피해자 A씨, 부산시 고위관계자에게 피해 사실 알림
- 8일 A씨, 부산성폭력상담소 방문
- 4월 중순 A씨, 오 전 시장 사퇴 요구, '범무법인 부산' 통해 '4월 말 까지 사퇴' 공중 발송
-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부산경찰청, 오거돈 성추행사건 내사 착수
- 27일 부산경찰청,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 전 시장 제명 결정

연암뉴스

경찰이 인정한 집무실 여직원 강제추행 외에 피해 직원 강제추행 치상, 또 다른 직원 강제추행 미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무고 혐의가 검찰에서 추가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한 부상이 있으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정신적 피해에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제추행 치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보다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오 전 시장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인지부조화 논리로 대응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2021년 1월 28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한 지 9개월 만이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성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며 “앞으로도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애초 3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오 전 시장 변호를 맡은 범무법인 부산의 기일 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는 재판이 연기되자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려 반발했다.

피해자는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한겨울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 오거돈에게 묻는다”며 “그냥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지는 만큼만 벌 받으면 안 될까요”라고 되물었다.

피해자는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사퇴와 사과를 공중하고 변호를 맡은 범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쟁의 빌미가 된다”며 “끝끝내 오거돈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월 초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했다.

양당 국회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다.

## ‘대책 또 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 전세난까지 심화

### ■ 개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를 비웃듯 뜨겁게 달아올라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은 서울에서 수도권을 거쳐 지방으로 옮겨가며 올랐고, 지방 상승세는 다시 서울에 영향을 미쳤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속도전으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은 전세난을 되레 심화하며 시장을 더욱 큰 혼란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았다.

급기야 정부는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김현미 장관에서 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ＬＨ) 사장으로 교체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 ■ 계속되는 규제에도 풍선효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5.36% 상승했다. 2011년 6.14%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서울이 2.67% 오르고 수도권은 6.49% 상승했다. 6대 광역시는 6.65% 치솟았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연초만 하더라도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전년 말 초 고강도 대책으로 꺾히는 12·16 대책을 내놓은 이후 주택시장은 급랭했다. 세제와 대출 등 가능한 모든 규제책을 총동원한 12·16 대책이 시장이 예상할 겨를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킨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안정세는 오래 가지 못하고 수도권의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불거졌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 대책으로 대응하다 급기야 6·17 대책을 내왔다.

하지만 역풍이 더 컸다.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면서 규제지역을 대폭 넓힌 데다 전세대출까지 묶은 탓에 부동산 규제에 우호적이던 수도권 서민층이 주택 대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 등을 돌렸다.

투기수요만 위축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에 받고 빠듯하게 중도금과 잔금을 맞춰놓았던 실수요자도 갑자기 대출이 줄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됐다.

청와대 참모 상당수가 공언한 대로 여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정 지지율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7·10 대책과 8·4 대책 등을 내놨다.

청약제도를 손질해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추가 신규주택을 개발하는 내용은 6·17 대책의 실패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정부는 군전용 골프장인 태릉CC 부지까지 주택용지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신규주택을 쥐어짜야 했다.

이와 같은 필사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웬만해선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수세가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됐다.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 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12월 17일 청약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부산과 대구 등 지방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도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시장 과열 양상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의 영향도 한몫했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대체 상승기로 접어든 데다 초저금리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기회만 되면 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폭 풀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이 커진 것도 악재였다.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주택자들이 어떻게든 주택을 구하려 했지만 이들도 뛰어오른 집값과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대됐다.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의 주택 통계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통계와 민간 정보업체의 통계 간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다 보니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임대차법

7월에는 국회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처리되면서 주택 시장에 또 한번 큰 파동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대 총선에서 압승을 한 여세를 몰아 임대차 3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정부는 20대 국회 때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당과 합의한 바 있어 새로운 정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굳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해야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임대차 3법의 근간이 되는 임대차신고제부터 시행해 주택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놓고 충분한 준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고 국회 문턱을 넘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 초부터 본격 시행됐다.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은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은 어쩔 수 없었다. 집주인 우위의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면서 신규 계약 전셋값이 다락같이 올랐고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도 두드러졌다.

큰 폭으로 오르는 전셋값에 차라리 집을 일단 사놓고 보자는 패닉바잉까지 겹치면서 매매값까지 치솟았다.

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32%로 수도권은 8.45%, 지방은 6.27%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은 5.58% 뛰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상당수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돼 당장 집 걱정을 던 것은 사실이다.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보증금을 5% 범위에서 올려주면 돼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증금을 올려주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등 새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신규 전세 매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어렵게 찾은 전셋집은 보증금이 수억원씩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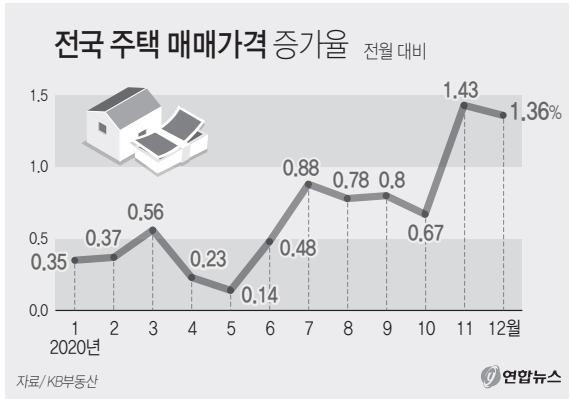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에서도 가격이 2배가량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도 나타났다.

임대차보호법 등이 행정법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은 결국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해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새로 집을 구입한 집주인과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았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긴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정리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는 11월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전세임대 등 11만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도심에 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하는 건설업체에는 공공택지 우선권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그 이후에도 전세시장의 불안은 좀체 해결되지 못했다.

## ■ 구원투수 변창흠의 등장

주택시장의 혼돈기에 결국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 12월 29일 최장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고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다.

김현미 장관은 3년 전 취임일성으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퇴임 직전에는 주택 공급 확대 주문이 힘에 부친 듯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쓸쓸히 퇴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에서 사장을 지내며 주택 공급 실무를 진두지휘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에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대 등 저밀 개발된 곳에 공공개발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쥐고 밀 개발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벌여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 텔레그램서 발생한 조직적 성착취…n번방 사건

### ■ n번방 ‘갓갓’ 문형욱, 아동 성착취물 직접 제작·유통

외국에서 주로 문제되던 아동 성착취물의 공유·유통 사건이 2020년 국내에서도 불거졌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이들 범죄의 악랄한 수법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문형욱(25)은 2015년부터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 계정을 해킹해 얻어낸 신상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치스러운 성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도록 했다.

성착취는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문형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공범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착취 모습을 찍어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했다.

검찰은 10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 n번방 연장선상 박사방 피해자 345명…범인 조주빈 징역 40+5년

박사방은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2018년부터 ‘박사’라는 대화명으로 SNS에서 활동

했다. 그는 SNS에 고액 알바나 스폰서 광고를 낸 뒤 청소년들에게 면접을 핑계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했다. 조주빈은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영상물은 보안이 엄격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유했다.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는 345명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2020년 3월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해 새로운 의문을 자아냈다.

조사 결과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11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4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인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원은 2021년 2월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 ■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 모두 검거

문형욱,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으로 불린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전모(39) 씨의 수법도 문형욱, 조주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 씨는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했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천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4차례 전시했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씨는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법원은 11월 전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 조주빈, 유인책·관리책·모집책 등 역할 세분화…범죄단체조직죄 적용

n번방·박사방 사건의 특징은 가해자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유통하고 많은 회원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조